

이재명 대통령, 23분 간 인공지능 28회·국민 21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4일 시정연설에 나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특히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10시 6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뒤 10시 8분 발언대에 서 10시 30분까지 총 23분 간 연설문을 낭독했다.

이날 시정연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인공지능'(28회)이었다.

이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의 중점 방향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내년도 인공지능 관련 정부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으로 올해(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21회)이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 시대 여는 韓의 첫 번째 예산"... 총 10.1조원 편성

산업(18회), 예산(16회), 정부(13회), 투자(12회), 성장(11회) 등 언급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나"라고 했다.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텅 빈 국민의힘쪽 의석을 바라보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이 언급됐다.

이밖에 '산업'이 18회, '예산'이 16회('예산안' 7회 포함) 언급됐으며, '정부'(13회),

'투자'(12회), '성장'(11회), '경제'·'국방'(각 6회), '안전'·'지방'(각 5회), '평화'·'청년'·'문화'(각 4회) 등이 빈번하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뉴시스



광산구의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제정 간담회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중 사고' 대비한 보호체계 마련 타 지자체 사례 공유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 모색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10월 31일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후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광산구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순영 센터장, 광산구장애인협회 조정자 회장, 송정다누리상인회 신용상 회장, 하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상완 센터장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회,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순영 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광산구 현실에 맞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용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보험 적용을 통해 사고 부담이 줄면 발달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고, 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되어 고용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돕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들이 사고의 두려움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행 기자

3대 걸쳐 중용된 '北외교 원로' 김영남 사망... 평창올림픽 망남

97세 일기로 3일 사망... 김정은 조문 애도

3대 지도자 모두 거치며 숙청·혁명화 안 겪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무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사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인 김영남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4일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종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

시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김 전 상임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위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유원·박정천·조춘룡·김덕훈 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다. 신문은 "자유, 평화, 친선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기울이던 날에 동지는 공화국의 대외관계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 전 상임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보필하며 외교 중책을 맡았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1928년 2월 4일 태어나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으며 모스크바 유학 생활도 했다. 간부 양성 기관인 중앙당학교(김일성고급당학교) 교수를 거쳐 1956년 당 중앙위 국제부 과장에서 시

작해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등을 역임했다.

1983년 정무원(현 내각) 부총리 겸 외교부장(현 외무상)에 올랐으며 1989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1974년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오른 이후 1978년 정치국 위원, 2010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김정일 체제에서는 대외활동을 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북한의 '얼굴' 역할을 했다.

김정일 시대를 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올라 21년 동안 '명목상 국가수반' 역할을 하다가 91세인 2019년 일선에서 물러났다. 북한 고위간부라면 흔히 경험하는 숙청·혁명화를 한번도 겪지 않아 '처세술의 달인'으로 불린다. /뉴시스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액 '국민 5배' 20억원... 다주택자도 61명"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일반 국민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율도 5명 중 1명꼴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2000만원)의 4.68배였다. 상위 10명의 평균은 165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회의원 중 유주택자는 234명,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61명(20.4%)이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로, 이 중 서울 소재가 134채(44.8%)였다. 강남 4구에만

61채가 집중됐다. 특히 299명의 조사대상 국회의원 가운데 95명(31.8%)이 보유 부동산을 전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입법 감독의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임대시장에 이해 관계로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신고가는 8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기준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정책사업팀 부장은 "의원들이 시세가 크게 오른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아파트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뉴시스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